

【트위스트】北朝鮮은 정신대문제와 관련하여 日本정부의 무성인한 태도를 강경하게 비판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북한대표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한국에서 만료 20만명의 이대인들을 강제노동했고 그 후에도 북한 체포를 했다고 지적한 뒤 『일본정부는 자명한 사실을 일본인 국가들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인권유린의 과거를 청산하라는 정치적 도발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정신대문제』를 강경하고

“挺身隊책임회피 급급

北, 日本 무성의 강력 비난

“아시아國 불신커질것”

과를 행한 일본이 과거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비인간적인 노예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지한 사죄에 의해서만 다 소나마 풀릴수 있을것이다. 『일본정부는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형식적인 조사와 몇마디의 사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와 일본정부가 정신대의 실상을 전면 조사 발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를 질투 일본은 국제공공체로서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것』이라고 경고했다.



汎아시아 挺身隊대책 連帶강화

東南亞 4국-日 민간대표 서울서 회의

臺灣 “피해자 31명 생존확인”

말聯 “17곳에 위안소 있었다”

진상규명·배상촉구...유엔 의제상정 모색

화한인을 설치운영하던 등 활발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은 지난 9월 수문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일본파견이 4개국 대표들이 각국의 정신대문제대책활동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태평양전쟁당시 정신대로 끌려간 이들 피해자를 본 아시아 각국의 민간 단체들이 서울에서 연대회의를 여는 기한을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정신대문제를 정식 상정 등 의하는 것을 촉구했다. 대만 출신 민간 대표 6명과 일본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를 열었다. 11일까지 계속되는 회의에서 필리핀 대만 등 정신대문제 조사기구들을 설립하고 지역개별에 정신 조사결과 31명의 생존확인부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도 말레이시아도 일본측의 부인과는 달리 광복후를 통해 일본군대에 의해 17곳에 위안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날 13일 필리핀의 3개 민간단체가 모여 결성한 「필리핀 중구위안부를 위한 대대단(TTC)」대표 벨라 산초는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합해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촉구하고 PRO법안을 과로 필리핀정부의 노력을 격려하는 일본의 참모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대표는 합석한 유엔회의의원인 시미즈 스미코(清水 澄子)도 『일본정부는 지난날 6일간의 발표를 통해 중구위안부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아첨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회담으로 야기된 아시아 각국의 치욕스런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여성들의 범아시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대표들은 「이들간의 회의후 일본은 배상과 각국정부의 정신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대회의를 삼일(3)로 확대 일본정부를 피해배상기구, 유엔인권회의의 민간단체 참가방안을 공동모색할 계획이다.」

〈金澤原〉